

표문화수도 조성사업 내달 본격화

표문화전당 10일 기공...정부 최대한 지원

설계자 우규승 "랜드마크보다 문화가 중요"

광주 동구에 들어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이 다음달 10일로 예정됨에 따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설계공모 당선자 우규승(재미건축가)씨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8 문화도시 국제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문화전당의 기공식이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라며 "문화전당의 구성 모델은 밖으로 향한 안뜰, 즉 기존 도시의 거리 및 지하층과 연결된 반

지하의 중심광장"이라고 소개했다.

우씨는 또 문화전당 설계안에 초고층 랜드마크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 "랜드마크는 해당 부지의 아름다운 역사는 가진 채 스스로만 뽐내는 건물이 될 수 있다"며 "랜드마크 보다는 문화 재생 전략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도 이날 국제포럼을 통해 "21세기 도시 재생의 화두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문화"라

며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문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문화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가 생산·소비·소통되는 문화 콘텐츠의 생산·유통이 중요하며, 도시의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23년까지 20년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영국 왕립건축가협회 금메달과 제55회 일본예술원상 등을 받은 이토 도요(伊東豊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국제협력 부학장으로 문화도시 전문가인 로베르토 그란디 교수, 홍콩의 웨스트카오롱문화지구 개발을 담당했던 민센트 쉐퍼드 건축사도 주제 발표자로 참여해 해외 문화도시 조성사례 등을 소개했다.

카트리나 스테슈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문화간 대화교장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세계의 도시들은 과도한 도심 확장과 획일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문화 다양성을 토대로 창의성과 문명간 대화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다양한 아시아 문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토 도요를 비롯한 주제 발표자들은 17일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 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과 부지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

한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비 2천 600억 원이 투입돼 2만1천324㎡ 규모로 건립되며 문화창조원, 아시아 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 지식문화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등이 들어선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설

5·18 28주년 '오월 광주' 참뜻 되새기자

내일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제28주년 기념일이다. 광주는 온통 추모열기에 휩싸여 있다. 수많은 참배객들이 국립 5·18묘지를 찾고 있고 기념행사도 다양하다. 국민들이 5·18정신을 기리고 있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우리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민주열사들이 군부독재에 항거해 흘린 피가 오늘날 민주화를 이룬 밑거름이 됐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5·18 민주열령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5·18을 맞는 심정은 착잡하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기념일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1980년 당시 '광주'를 짓밟은 군부세력이 만든 민주정의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5·18의 역사적 인식에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사회적 갈등도 심각하다. 전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등 반정부 투쟁으로 뜨겁다. 광주에서도 기념일을 전후해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해마다 5월이면 수많은 정치인과 국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어김없이 5·18 정신의 계승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열령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경계하는 것은 '정신 계승' 운운하며 5·18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올 5·18기념행사의 주제는 '오월의 희망으로 세상을 보라'다. '광주사태' 등의 천박한 역사 인식이나 불법·폭력시위로 5월정신의 참뜻을 계승, 발전시킬 수 없다. 5·18 기념일을 맞아 국민 모두가 '오월 광주'의 오늘을 의미하는 깊이가 되새겼으면 싶다.

미국에서 의심받은 美 쇠고기 안전 시스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CNN 방송이 미국 쇠고기의 안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의 주요 방송이 미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직접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한국인이 먹는 쇠고기가 같은 믿을 수 없게 됐고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CNN은 앞은뱅이 소 이른바 '다우너 소'의 도축 동영상을 거론하면서 당연히 거쳐야 할 수의사의 안전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도축장 검사관은 일부 지역의 경우는 20%, 전국적으로 평균 11%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안전검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것이 나라의 최고 목적으로, 국민건강이 최우선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인조차 안전성을 의심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우리 식탁에 올려도 좋은지 묻고 싶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 파문 축소에 급급하지 말고 협상경위를 낱알이 밝히고 재협상을 해서라도 국민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했던 전직 로비스트들이 미 농무부의 핵심 5개 고위직을 맡고 있다며 로비가 능력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 담당 기구가 15개에 까지 분산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지적했다. CNN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시스템은 붕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것이 나라의 최고 목적으로, 국민건강이 최우선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인조차 안전성을 의심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우리 식탁에 올려도 좋은지 묻고 싶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 파문 축소에 급급하지 말고 협상경위를 낱알이 밝히고 재협상을 해서라도 국민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쇠고기 국민 안심토록 美 협조를"

李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최근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문제, 안전 문제에 있어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협조해 철저한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카를로스 M.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배석한 김은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동의를 표시한 뒤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이 불안해 하는 상황을 충분히 전달 받고 있다"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미 상무장관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지휘체계 상성에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날 접견을 계기로 양국이 최근 천명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시 안 걸린 닭·오리도 수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에 대한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전남도가 AI와 관련이 없는 일반 농가의 오리·닭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매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16일 일반 농가의 오리·닭 수매에 대한 농림수산물부의 규제지침을 수매 기준과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지침이 오는 19일께 내려를 것으로 보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중·장기적인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종란과 종계를 일정 수준 폐기 처리할 계획이며, 경영상태가 악화된 계열업체와 계란 집하장 등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일반 농가에 대한 수매 기간은 수매 시작일로부터 2개월이며 수매 가격은 수매 당일 전 주의 주간 산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까지 전남도내에서 AI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 경제지역의 수매 대상은 모두 27농가에 50만마리에 이르는데 가운데 15농가에 17만7천200마리에 대한 수매가 이뤄졌다.

전남지역 닭·오리 사육농가는 1천500여 농가로 총 2천만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수매 기간이 2개월로 한정된 만큼 출하 가능한 닭·오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29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기부 2200-616	문화홍보부 2200-626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기부 2200-617	여론대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 1부 2200-618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사건부 2200-690	(F A X 02-773-9335)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 수도권기업 2곳과

124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전남도가 수도권 기업 2곳과 124억여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16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이인곤 진도군수, 서창연(주)남포물산 대표, 이원호 KLK(Korea Leader's Korea)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의 수산식품을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주)남포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군 오신면 일원 6천600㎡ 부지에 총 70억원을 투자해 미역과 다시마 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KLK는 우주항공과 군용에서부터 건축용 난방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면상 발열체와 화재 진압용 방화복에 적용하는 냉온열 조끼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완도군 농공단지 내 6천630㎡의 터에 54억원을 투자해 난방용 면상 발열체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국세청, 쇠신방안 발표

국세청이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전면 쇠신한다.

조사 착수 전에 조사 이유와 준비사항, 납세자 권리 등을 설명해주고 중점 조사 대상 기준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하며 조사 받는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을 평가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세무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신 요인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바뀌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후 조사를 착수할 때까지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 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대상 선정 사유, 조사 방향, 절차, 납세자의 권리, 준비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세무조사 사

조사 대상에 민간 참여 ... 납세자가 조사공무원 평가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관리사항 등 모든 세무조사 절차를 알기 쉽게 그린 북(Green Book)이라는 안내책자에 담아 제공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중간에 진행 내용과 앞으로 조사 방향을 알려주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조사가 끝나는 날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세무분야 컨설팅을 해주는 한편 불복제도와 및 납부 등의 후속 절차를 상세하게 알려주기로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협조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만·불안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해피 콜(Happy Call)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식품피해 집단소송' 특별법으로 추진

최근 도입이 무산된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가 특별법으로 추진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무부가 식품 피해 집단소송제를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역시 법무부 소관 특별법 형태"라며

"법무부가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 역시 같은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1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개정안에 집단소송제를 담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구조대 41명 中 급파

실종 한국인 유학생 5명 구조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 현장의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소방방재청 소속 '119 국제구조대' 41명이 16일 중국 현지에서 파견됐다.

'119 국제구조대'는 구조 경력 5년 이상의 고참 구조대원 41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조견 2마리와 함께 음파와 전파를 이용해 생존자를 찾아내는 매몰자 탐지기 등 첨단장비 108종 337점도 동원된다.

이번 구조대 파견은 중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구조대는 전날 파견된 일본 구조대와 함께 외국 구조대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지원에 나서게 됐다.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 현장의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소방방재청 소속 '119 국제구조대' 41명이 16일 중국 현지에서 파견됐다.

이번 구조대 파견은 중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구조대는 전날 파견된 일본 구조대와 함께 외국 구조대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지원에 나서게 됐다.

정부는 중국 측이 추후 희망할 경우 의료 인력파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조대 파견과는 별도로 텐트 1천300여 동과 담요 5천여 장 등 긴급 구호품을 특별화물기 편으로 18일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넉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오전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예방하고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지진 피해가 컸던 쓰촨성 주변 지역에서 연락이 끊겼던 한국인 유학생 5명이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다 서식지역인 위룽현에서 발견된 한국인 5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던 한국인 유학생들로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빛의 만평

- 김중두



未完의 5·18에...